

납품대금 연동제



대기업과 중소·벤처기업이 함께 공감하며
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.



중소벤처기업부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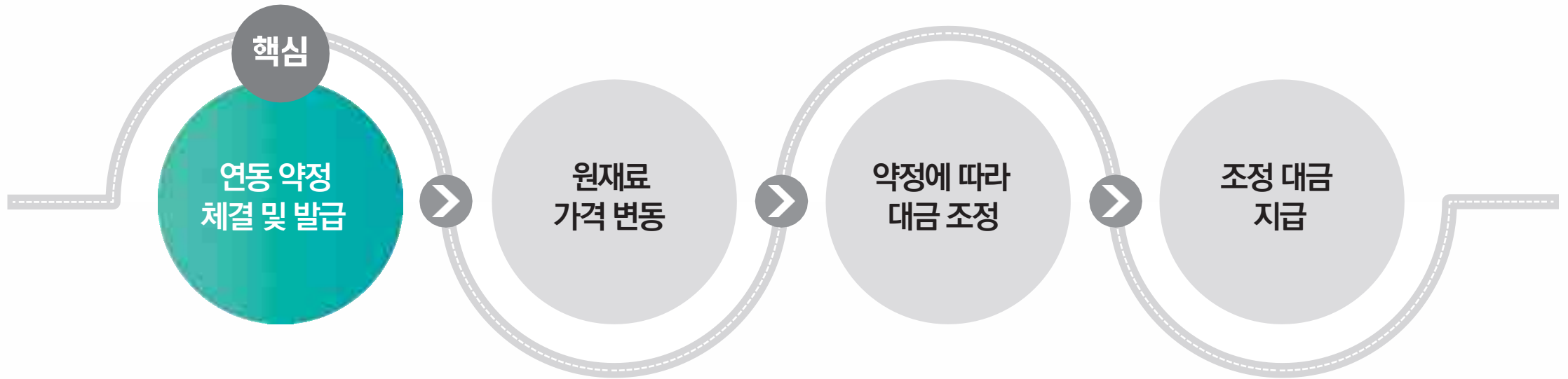
1	납품대금 연동제란 01
2	추진 경과 02
3	시행시기 및 적용례 03
4	적용대상 거래유형 04
5	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06
6	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09
7	법 위반 시 제재 14
8	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9
9	참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예시 21
10	Q&A 23

1

납품대금 연동제란?



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·공사·가공·수리 등을 위탁할 때
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
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」





➤ 시범운영('22.9. ~)

- '22년 9월,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
- '22년 12월까지 총 388개사 참여
(위탁 47개사, 수탁 341개사)
- 371건의 연동 약정 체결

➤ 국회 본회의 통과('22. 12. 8.)

➤ 법률 공포('23. 1. 3.)



3

시행 시기 및 적용례



➤ '23년 10월 4일 시행

➤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·갱신하는 수탁·위탁거래 약정부터 적용





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·위탁거래

> 수탁·위탁거래란?

위탁기업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로서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기업

물품등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

제조등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

위탁 물품등의 규격,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것

※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수탁·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

수탁기업 위탁 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

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.
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)

위탁기업 (대·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기업 등)

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

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 납품하는 행위

수탁기업 (중소기업)



➤ (주요 원재료) **납품대금에서 1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**

-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

※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

Q

원재료의 정의 및
범위는 무엇인지?

A

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, 화합물, 가공물,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



Q

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
범위에 포함되는지?

A

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



➤ 위탁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**소기업**에 해당하는 경우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

(ex) 1차 금속 제조업(C24)은 3년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

➤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**90일 이내**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

※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

- 구체적 기간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(~'23년 7월)



➤ 납품대금이 **1억원 이하**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
※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

- 구체적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(~'23년 7월)

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**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**한 경우

- 다만,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





Q

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
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A

이 경우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

탈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요구, 시정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,
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

(개정) 상생협력법
제21소제4항

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·위탁거래에 관한
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

➤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

-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※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(~'23년 7월)

➤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본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





> 물품등의 명칭

-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 등을 위탁한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

(예시) 동 케이블, Wire Rope

> 주요 원재료

-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인 원재료

(예시)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“동”, Wire Rope에 사용되는 “경강선재”



> 조정요건

-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(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등)
※ ‘기준시점’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,
‘비교시점’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
- 변동률의 범위는 $\pm 0\sim 10\%$ 의 범위에서
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

(예시) $\pm 3\%$ 이상, $\pm 1\%$ 이상



Q

상승 시뿐만 아니라 하락 시에도
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?



A

상승과 하락 시 모두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음



> 기준지표

- ‘주요 원재료’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

(예시) 런던금속거래소(LME, London Metal Exchange), 한국은행(www.bok.or.kr),
e-나라지표(www.index.go.kr), 조달청(www.pps.go.kr), 산업통상자원부(www.motle.go.kr),
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

Q 공신력 있는 기관이
고시하는 지표를
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
적절하지 않은 경우는
어떻게 해야 하는지?



A 다음과 같은 가격정보를 기준지표로 정할 수 있음

- | | | |
|---|--|--|
|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|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| ③ 그 밖에 약정서, 원가내역서,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 |
|---|--|--|



> 산식

-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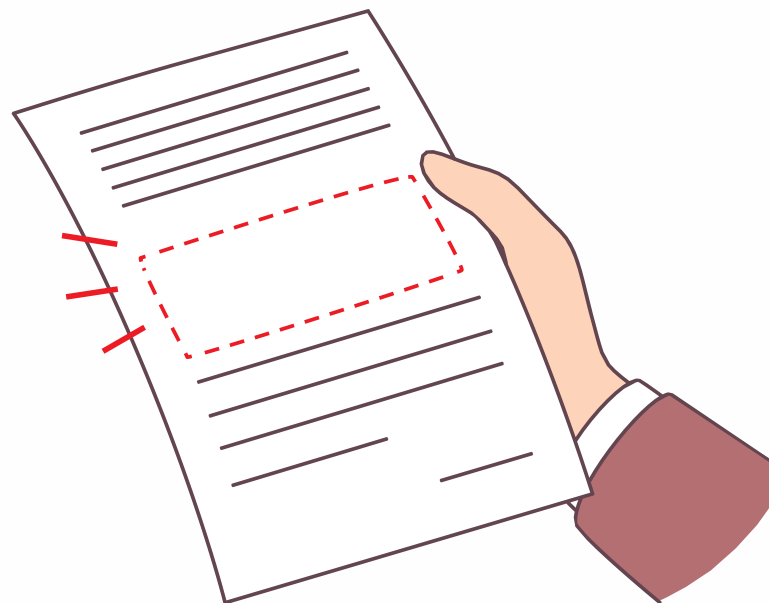
$$\begin{array}{c} \boxed{\text{변경 단가 (원/EA)}} \end{array} = \begin{array}{c} \boxed{\text{기존 단가 (원/EA)}} \end{array} + \begin{array}{c} \boxed{\text{품목별 변동가격* (원/Kg)}} \\ \times \\ \boxed{\text{품목별 소재중량 (Kg/EA)}} \\ \times \\ \boxed{\text{반영비율 (100\%)}} \end{array}$$

* 품목별 변동가격(원/Kg) = 비교시점의 품목 기준가격(원/Kg) - 기준시점의 품목 기준가격(원/Kg)



➤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

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개선요구, 시정권고·명령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





➤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

-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
- 개선요구, 시정조치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



성실한 협의 의무
위반 예시

- ▶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
- ▶ 회의 개최,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
- ▶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



➤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

탈법행위란?

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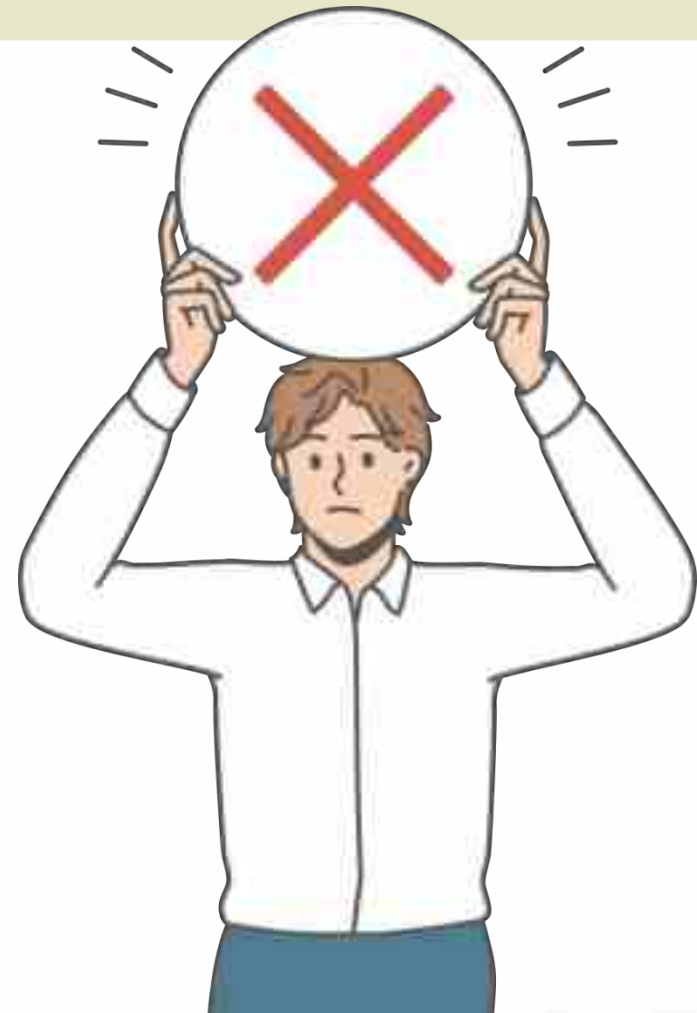
- (예시)
-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
 -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

-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- 개선요구, 시정권고 · 명령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



➤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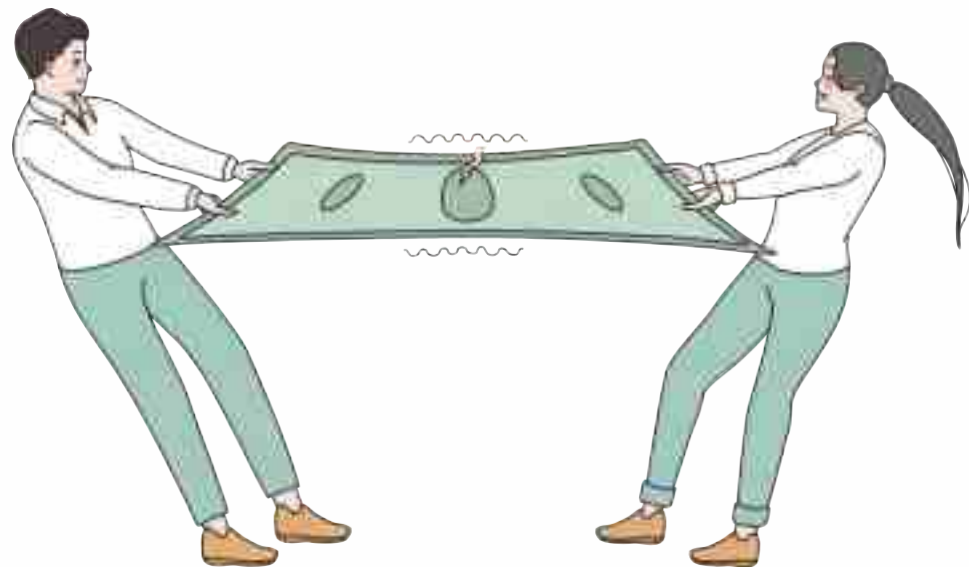
-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·변경하는 경우
- 개선요구, 시정조치 및 벌점 부과
 -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





연동 대금 미지급

-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개선요구, 시정권고 · 명령, 공표 및 벌점 부과
 - 벌점 5점 초과 시,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
-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부과 가능
 - ※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8 ▶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



▶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(모집공고 예정)

- (동행기업)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
-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

인센티브

장관표창,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,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시
우대평가,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범위반 점수 감경, 중소기업 정책자금
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
→ 추후 확대 정비 예정



8 ▶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



➤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

- 연동제 설명, 원재료 가격정보 확인 기능 등을 탑재

➤ 컨설팅 제공

- 연동조건 협의 및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
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 구성
- 온라인 · 방문상담 및 교육 등 제공

➤ 연동 표준약정서 및 가이드북 배포





140

◆ 지체사랑의 열매, 재단, 불교, 교단, 사찰을 지체하기 위하여 열매회는 여러 종교계 공동체로 모이는 사랑의 지체이고 나머지는 전직종교로 지체할 수 있음

③ 대체에너지 개발, 행정 개혁 또는 생활을 지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통행적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지각하고 나타내는 전파문자로 대체할 수 있음.

